

의안번호	제 66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10월 24일 (제 335 회)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교육위원회위원장
제출연월일	2014년 10월 22일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66
----------	----

제안연월일 : 2014년 10월22일
제안자: 교육위원회위원장

□ 주 문

세명대학교가 경기도 하남시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제천시역은 물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우려되어 관계기관에 설립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건의하는 것임.

□ 제안이유

- 세명대학교는 2014. 2월 하남시 종합대학 유치 공모에 응모하여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4. 10월 현재 세명대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TF팀 구성과 MOU체결을 준비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시, 제천시의 교육·사회·문화·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점대학의 핵심을 잃을 수 있는바, 이로 인한 제천시역은 물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 제천시와 충청북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명대학교의 하남

제2캠퍼스 설립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외의 발전과 이익만을 위해 지방 대학과 지방 인적자원이 수도권으로 흡입되어 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관련법 규정을 정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과밀 억제권으로의 대학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함으로써,
- 제천시역 거점 대학인 세명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공존하며, 우리나라 명문대학으로 건실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관계기관에 세명대학교 하남 제2 캠퍼스 설립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건의하는 것임.

보내는 곳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

붙임: 건의문 1부.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세명대학교는 올해 2월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공여지 28만 1953㎡에 세명대학교 하남 캠퍼스와 한방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1991년 10개학과 400명으로 제천시에 뿌리를 내려 2014년 현재, 교수 298명이 28개 학과에서 학사 22,982명, 석사 1,386명, 박사 130명을 배출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제천의 교육·사회·문화·경제발전의 중심에 서서 건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5개학과 학생 5,574명, 교수300명으로 2019년 개교 예정인 세명대학교 하남 제2캠퍼스와 한방대학병원이 하남시에 설립될 경우, 제천시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교육·사회·문화·경제발전에 기여해 오던 핵심을 잃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지역 인재 유출이 심화되어 본교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과 세명대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지역경제 침체 등 제천의 교육과 지역발전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청북도차원에서조차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많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려의 사례는 이와 유사한 타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학교의 경우 2013년 3월 인천 제2 캠퍼스 설립 후 학교주변의 원룸 145동 2,000실중 60%인 1,200실이 공실로 나타나는 등 현재 현저한 지역경기침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한 타시·도의 우를 범하지 않고, 제천시민과 충북도민 모두가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명대학교 하남 제2캠퍼스 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제천시민 13만 7천명을 포함한 160만 충청도민의 열망을 담아 세명대학교 하남 제2캠퍼스 설립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제천시는 시민과 함께 세명대학교가 하남 제2캠퍼스 설립을 철회 하고 지역 명문대학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타시·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공동 대응 노력을 추진하고,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방안과 협력체계 구축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지방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령¹⁾을 정비하고, 광역시·도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협의 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방대학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회는 수도권 내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²⁾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7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7조)
2) 박수현 의원대표발의('13. 7. 17.발의, '13. 7. 18. 국회안전행정위원회 회부)